

# 2000년대 한국教科書의 未來像

國定の 복수화, 檢定の 5종 제한 완화 바람직

현행 초·중·고교 교과서의 개선방향과 당면과제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2000년대 한국교과서의 미래상'이란 주제로 10월 14일 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열렸다. 한국2종교과서협회(이사장 李鍾泰)가 마련한 이 세미나에서는 교육계, 학계, 언론계, 출판계 인사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날 토론에는 呂永茂 동아일보 연구위원 楊澈愚 敎學社 사장 郭炳善 한국교육개발원교육과정연구부장 金炫植 동아출판사 사장 郭相萬 한국교육개발원교육자료부장 孔鍾源 중앙일보논설위원 權炳壹 志學社사장 김철연 중앙교육평가원출제관리부장 씨 등이 참가했다. 다음은 이 세미나의 주제발표 요지이다.

## 교과서정책과 교육의 質

金信一

서울대사범대 교수·교육학

### 교과서는 教育의 質을 결정

교과서는 교육 내용의 범위와 수준과 성격 을 문서화한 것이므로, 교육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범위를 결정하고 동시에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교육의 방향을 바꾸라고 할 때, 또는 교육의 수준을 높이거나 낮추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교과서를 개정하는 것은 교과서가 방향 제시와 통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는 교육의 핵심 매체이다.

교과서는 교수활동과 학습활동을 통제함으로써 교육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즉, 교육결과의 質을 결정한다. 그렇다고 교과서가 교육결과의 質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물론 아니다. 학교시설, 교구, 교사 對 학생의 비율, 교수방법 등도 교육결과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교육시설과 교사수 등이 풍부한 경우에는 교과서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世界銀行의 교육연구실 보고서가 밝히고 있듯이, 교육 여건이 부실한 경우에는 교과서의 영향력은 대단히 높아진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서 교과서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교과서가 교육의 質을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바로 해당한다.

### 교과서정책은 교과서의 質을 결정

교과서정책은 나라마다 다르나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하나는 개방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통제정책이다.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국가는 미국처럼 교과서의 집필, 생산, 유통, 채택 등에 국가가 간여하지 않고 일종의 자유시장 원리에 맡겨둔다.

교과서의 통제정책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내용, 체제, 유통을 국가가 관리하는 방식이다.

교과서에 대한 개방정책이든 통제정책이든, 문제는 그 나라의 사회적·교육적 여건과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 문화의 수준이 낮고, 교사들의 전문적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완전 개방정책을 쓰면, 양질의 교과서 출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계가 비교육적인 비리에 쉽게 휘말려들 것이다. 반면에 국가가 세세한 부분까지 경직된 행정을 하게 되면 교과서는 질적으로 침체되고 오히려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교과서정책은 修正되어야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마치 전매상품과 같은, 또는 그보다 더 획일적인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교육외적인 잡음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핵심적인 교육매체로서의 교과서의 質은 향상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과서정책은 현재보다는 과감히 개방지향으로 나아가야 하되, 상업주의의 오염은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남겨 두어야 한다. 따라서 교과서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교과서의 내용은 확정된 지식을 담기보다 지적 사고를 자극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둘째, 국정교과서를 과감히 줄여서 검인정 교과서의 수를 늘려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을 검인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셋째, 교과서의 규격과 체제를 질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방침하에 면수와 인쇄의 색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교과서의 質을 적어도 일반 교양도서보다 나은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네째, 검인정교과서의 과목당 5종류 제한을 풀어 과목에 따라 5~10종류로 늘려야 한다.

다섯째, 현재 교과서의 검정·심사기준이 비밀로 되어 있는데, 검정·심사가 교과서의 質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기준은 당연히 모든 저자와 출판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 싼 교육과 좋은 교과서

劉庚煥

조선일보 논설위원

### 교과서의 역할

교과서의 내용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제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취한 문제의 결과를 본보기로 제시된 것이라 봐야 옳다. 그러므로 '열려진 교과서'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즉, 서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어 자기의 접근방법으로도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데 기초교육의 효과가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가 곧 학습의 자료이기보다는, 다른 학습자료를 응용하는 준거를 제시해서 보충자료나 정보자료를 개발하도록 하는 자극제로서 求心力을 내포해야만 교과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또 '교과서는 읽을수록 좋다'는 동양식 개념을 벗어나야 한다.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공급이 이상적이라고 하나 중등교육과정에서까지 값이 싼 실비의 교재만 내세울 수는 없다.

진실로 싼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효과에서 측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교과서구입대금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 검인정 5종 합격제의 문제

첫째, 1종 교과서(국정)도 더 좋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복수화할 수 있다. 1종 도서라고 해서 한 과목에 1도서주의를 고수해야 할 근거는 없다. 이제 문교부가 발행권을 계속 가지면 서도 더 좋은 1종 교과서를 만들 방안을 개방적으로 토론할 단계에 왔다고 본다.

둘째, 2종 교과서는 좋은 교과서를 위해서 시장경제의 원리가 보다 폭넓게 적용 되도록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과거 교과서파동 이후 묵시적인 합의점에 5종(또는 5종 이내)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과서의 投機와 利權

교과서를 투기성으로 보게하는 것은 국가적



교과서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 전경.

으로 손실일 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 걸쳐 대단한 낭비이다. 그렇다면, 검인정업무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없겠는가. 만일 수시출願制를 받아들인다면 저자와 출판사가 불합격된 원인을 분석해서 재출원할 수가 있겠고, 따라서 투기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시출원제가 좋은 교과서를 위해서나 교과서 출판계의 육성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 좋은 교과서의 질과 유형

자연과학 교과서의 색도 인쇄 문제, 교과서의 크기 제한 문제 등 짝 교육, 돈을 들이지 않는 교육이라는 고정관념에서 교육의 수단을 묶어놓고 좋은 교과서를 기대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1종 교과서는 정부가 위촉하는 연구개발형 교과서로 인식을 바꿔야 하고, 2종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도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인의 사명이나 자부심을 5년의 기득권이나 이에 따른 참고서류의 이권보다 더 내세울 수 있도록 출판평도 개선에 앞장서야 하겠다.

## 교과서 정책의 문제점과 방향

姜信雄

홍익대 교수·교육학

### 개방정책의 추구

확립화된 교과용 도서의 편찬정책을 개방정책으로 전환하여 경쟁에 의한 자료의 질 개선과 다양화를 교과서개혁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2000년대를 내다보는 장기적 전망하에서 1종 교과서는 점차 검인정으로 확대해나가고, 검인정도서는 그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교

과서개발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처리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과서 발행제도가 확실성을 보장하여 학교 교육의 효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비추어서도 자율과 경쟁에 의해서 질 좋은 교재가 개발되도록 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과정을 국가가 제정하고 관리하는 한, 교육내용에 대한 국가의 의도는 원천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교과서 발행정책을 개방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내용이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져 학교교육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개방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경우, 여러가지의 정책대안이 가능하다. 그중 중요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2종 교과용 도서(검인정 도서) 과목의 대상을 확대하며 종수의 규제는 완화한다.

이것은 현재의 1종 도서를 2종 도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2종 도서로 발행하는 경우에도 책당 5종으로 묶어 있는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2. 각급학교 1종 도서(문교부발행 도서)를 복수화하고 필요에 따라 능력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3. 참고서가 필요없도록 교과서를 편찬하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 각종 부교재를 함께 개발하도록 한다.

4. 교과서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교과서개발에 대한 재정투자 및 민간부문의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도록 하며, 교과서의 종적·횡적 통폐합을 연구 검토하여 교과서발행의 경제성을 높인다.

5. 활기찬 교육산업계를 건전하게 육성한다.

### 개선의 방향

우리는 현대 교육과정의 대전제인 '자율성' 그리고 '다양성'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과서정책의 개선방향을 설정해야 할 긴박한 시점에 처해 있다. 여기에 부응하는 정책당국의 보다 정성어린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집중되어야만 한다.

한 예로, 1950년대 초에 이스라엘 문교부가 새로운 과학교육을 위한 교재의 제작 개발을 위해 과학담당 교사들의 연수교육관계 예산을 포함한 전체 문교예산의 20%에 해당하는 투자를 결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과학교육의 디딤돌을 구축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할나위 없이 깊은 반성과 암시를 가져다 준다.

## 교과서의 質改善 과제

韓鍾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미래사회에 대비한 질개선 방향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과서의 질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감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1. 교과서의 성격을 재정립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실현시키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화한 교과서식의 표본집 성격에서 창의적 사고와 활동을 돕는 학습자료집의 성격으로 바꾸어야만 교과서의 질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교과서관이 바뀌려면 학교 및 입시제도에서 평가체제가 혁신되어야 한다. 지식의 암기정도만을 측정하는 평가방법을 바꾸어 문제해결력, 사고력의 변화 등을 측정하는 평가체제로 전환해야만 교과서에 대한 현재와 같은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현 교과서중심 평가에서 교육목표중심 평가로 시급히 전환하는 대책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2.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의 時差를 확대해야 한다.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과서제작에 필요한 절대시간 확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교육과정 개정 후 2~3년간의 제작기간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는 1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교과서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왔다.

3. 교과서 질관리 체제를 2원화하여 질 개선책을 보장하여야 한다.

현행 교과서의 질관리는 '관주도로' 그치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자인 학교는 평가 및 질관리 기회가 배제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학교나 학생이 원하는 교과서가 출현하기보다는 제작자 편의에 맞는 교과서가 나오기 쉽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래의 관주도관리제도에 학교 단위 또는 학교群단위의 평가체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4. 교과서의 정가결정은 교과서의 교육적 기본요건을 근거로 해야 한다.

교과서 제작비는 원초적(직접적) 요건보다는 교육적 요건을 근거로 산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 즉 학습효과를 위한 색도, 지질, 학습정보를 충분히 다루기 위한 분량(쪽수 제한 완화)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범위에서 교과서 제작비가 산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교과서정책은 작은 경제규모에 걸맞게 운영되어 왔다. 그런데 그 경제규모는 60~70년대 경제규모였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0년대 규모, 특히 2000년대의 규모는 20년 전과는 다르다. 그 규모가 개인 GNP 2000~5000달러가 되면, 개방정책·자율화정책이 그 규모에 걸맞다. 그 정도의 규모는 자율적인 시장경제체제에 맡겨야지, 관주도 통제로는 어느 의미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 광고문의

732-1431~3  
출판저널